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 개최배경과 전망

전 현 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7일 발표되었다.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회의를 6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라고 보도하였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4월과 9월 연 2회 개최되어 오다가 1998년 이후부터는 매년 1회 개최되었다(2003년만 제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가 지난 4월 9일 제2차 회의 이후 약 2개월만에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의 방중 결과를 최고인민회의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경으로 가는 길에 중국의 개방지구인 다렌과 텐진을 방문하였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의 대담에서도 개방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공조를 과시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소행’으로 발표된 이후 남북관계 경색 및 국제적 대북 압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남한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고 이에 대한 응징으로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국제적 제재를 가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전인민적 공분’을 통해 남한을 비난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려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김일철 국방위원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질하였는바, 이에 대한 후속인사 단행이 필요했을 것이다.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도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김정일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후계자 김정은의 국방위원회내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도 느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를 전제로 했을 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은 개방지구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거의 8-9년 정도를 주기로 개방정책을 발표하였다. 1970년대 초반의 개방도입을 필두로 1983년 합영법 채택, 1991년 나진선봉특구 설정,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및 신의주 특구 발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북한 개방의 특징은 대외 환경이 매우 어려울 때를 택한다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대외 압력을 피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금번에도 신의주나 원산, 남포 등에 대한 개방특구 지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은 대남 ‘2중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사건의 북한책임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이 천명되는 한편 ‘남북한 합동조사’를 위한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도 함께 제의될 가

능성이 있다. ‘천안함 사건 진상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매우 경직화될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고 북한도 이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대북 ‘군사공격’을 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무기를 동원, ‘천백배의 보복’을 천명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주변 환경의 엄중함을 이유로 후계자의 조기 가시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방위원회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김일철 위원에 대한 보선은 물론 후계예정자인 김정은에게 정식 지위를 부여할 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이미 국방위원회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있는바, 김정일 건강 및 대중 관계를 고려하여 ‘김정은 지도체계’를 확립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군부, 내각, 노동당 등에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다 전문성이 강한 인물들(專)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